

방송의 700MHz 할당은 헌법적 명령

국민행복 700 플랜 토론회 열려

11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MBC와 방송인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방송문화진흥회가 후원하는 ‘국민행복 700 플랜 토론회’가 열렸다. 본 토론회는 최근 발표된 국민행복 700 플랜에 담긴 지상파 중심의 UHD-TV 발전을 모색하고 그 비전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이에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방송기술의 현안이 방송 전체를 관통하는 시대인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김문환 방문진 이사장은 “국민행복 700 플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주파수 할당 정책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상파 방송의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지지한다는 전제로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방송용 할당은 헌법적인 명령이다”고 단언했다. 동시

에 최 교수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판결을 예로 들며 “공공재인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은 방송의 지속적인 존속 및 발전방향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현재 대한민국의 주파수 할당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면 단연코 방송 할당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 방송의 중심이 지상파 방송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이에 따른 공적 서비스 책무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방송 할당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가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하겠다는 것은 공공재의 무리한 민영화로 주도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진만 강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

회에서 석원혁 MBC 디지털본부장은 “지상파 UHD-TV의 가능 여부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에 달려 있다”며 “단순히 가입자를 잡아두기 위한 용도로 해당 주파수를 활용할 것인지, 무료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를 위해 해당 주파수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영란 매비우스 국장은 “모든 논의의 원칙은 공적 서비스의 구현이다”고 단언하며 “해당 주파수가 무료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방송의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지상파 직접수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통신의 주파수 할당 근거인 모바일 트래픽 해소와 전 세계 통신 활용설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낮은 직접수신을 때문에 700MHz 대역 주파수 방송 할당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주파수 활용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UHD를 프리미엄 서비스로 구축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공공의 재원인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굳이 산업적인 시각으로 재단할 필요가 없다”며 “공공의 재원이라는 가치판단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 논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700MHz 대역 주파수와 난시청 해소의 상관관계는 생각보다 낮다”며 “전략적인 관점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방송의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동시에 낮은 직접수신율에 대한 지적과 공공의 미디어 환경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방송의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한 근본적인 논리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관점도 눈길을 끌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124, 케이블 가입을 권유한다?

직접수신 방해하는 정부의 X맨 놀이

헌법 34조 2항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최소한 정부는 국민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2013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최소한 미디어 시장에 있어서 기본적인 헌법 정신을 흔들고 있다.

현재 지상파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직접수신가구는 전화를 들고 국번 없이 124번을 누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상파 124 콜센터’는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 따라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및 채널재배치 종료 과정에서 TV 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낮은 직접수신율이 많은 지역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124 콜센터’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야기되는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본지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124 콜센터’를 ‘(가칭) 저소득층 디지털 보급 TV 콜센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아직 많은 논의의 과정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검토’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부조직인 미래부가 직접 나서 무료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를 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래부는 새로운 콜센터를 통해 지상파 직접수신과 케이블 상품을 동시에 안내하게 만든다는 방침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래부의 ‘검토’가 ‘확신’이 되면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및 디지털 방송 시작 과정에서 불편을 겪던 지상파 직접수신가구가 124 번호를 통해 난데없이 케이블 가입 안내를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현재 지상파 124 콜센터는 2012년 3월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DTV KOREA에서 미래부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평균 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사안에 따라 100~200명 수준의 증원도 가능한 구조다. 지금까지 아날로그 방송 지역별 순차종료에 따른 민원, 정부지원 신청(안테나, 컨버터), 채널재배치 민원접수 등을 수행했으며 현재 직접수신가구의 정부지원 신청 장비에 대한 민원, 지상파 직접수신용 안테나 구입문의, 공시청 설비 지원 접수도 받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부의 이러한 ‘검토’는 명칭에서도 맞지 않는다. 미래부는 ‘(가칭) 저소득층 디지털 보급 TV 콜센터’라는 이름을 내세우긴 했지만 직접수신을 원하는 가구에 돈을 내는 케이블 방송을 권하는 콜센터가 과연 ‘저소득층’을 위한 것인지도 따져 봐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클리어룸 TV 상용화를 추진하며 엉뚱한 홈쇼핑 채널을 용인하려는 모습과 묘하게 오버랩되는 부분이다. 물론 추후 변경된 콜센터가 새로운 홍보를 통해 지상파+케이블 지원 이미지로 고착화되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과연 이렇게까지 케이블 가입을 정부가 독려해도 되는가는 문제가 남는다.

최근 일각에서 “직접수신율이 낮은 지상파 방송사가 UHD-TV는 해서 뭐할 것이며, 700MHz 대역 주파수를 가져가서 뭐할 것이냐”고 비웃는 실정이다. 그러나 알려진 직접수신을 통계의 오류가 심각하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정부가 무료 보편의 직접수신 환경을 방해해서는 곤란하다. 만약 미래부의 콜센터 변경 검토가 가정이 아닌 확신이 될 경우, 정부의 지상파 디지털 전환 후속 지원 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직접수신율은 지상파의 노력과는 별개로 끝없는 추락을 거듭할 것이다. 여기에 최근 ‘지상파 124 콜센터’가 ARS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각 방송사가 각자 상담을 처리하는 환경이 구축된 부분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Photo News



“우리의 동료를 위해”

11월 19일 방송인총연합회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에게 ‘방송인총연합회 해직자 복직을 위한 서명지’를 전달했다. 최근 성과없이 종료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의 초라한 결과와 묘한 대비를 이룬다. (방송인총연합회 제공)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 R O A D C A S T I N G & T E C H N O L O G 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 안내문 발송
- KOB(국제방송장비, 음향기기)전시회 무료
-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방법

- 1년간 8만원 / 6개월 5만원
- 계좌 : 씨티은행 187-00275-245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02-3219-5635 팩스 : 02-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사설

국민 혜택과 사업자 특혜는 구분되어야

특혜를 위한 특혜를 반대한다

11월 27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아날로그 케이블 TV에서 돈을 더 내지 않아도 선명하게 TV를 볼 수 있게 하는 기술 방식(8VSB)은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된다”고 언급하며 “지상파는 케이블에 이 방식을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이러한 반대는) 지상파만 (혜당 방식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앞서 가는 기술로 국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다면 어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는 말과 더불어 “8VSB 허용에 지상파도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전망도 하였다. 여기에 “담당 부처인 미래부 장관이 하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언급으로 화통점점을 찍었다.

케이블 방송 8VSB 허용은 특혜

케이블 방송에 대한 8VSB 허용은 케이블방송의 저가화로 저가 유료방송 시장을 구축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여 콘텐츠 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디지털 전환에 소주원의 노력과 비용을 지불하고도 각종 규제에 의해 다채널 서비스도 추진하지 못하고, 수신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신율이 하락하는 지상파 방송에 비해 케이블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은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고 8VSB라는 짝퉁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디지털 TV를 보유한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에게 고화질 미디어 서비스

를 제공한다는 점을 국민의 편익으로 정리할 수 있었지만, 이는 추후 저가 콘텐츠를 양산하는 환경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시청자에게 저질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시청자 편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허용하려고 하지만 이는 사업자 특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여기서 국민 편익을 운운하며 8VSB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이 위원장의 발언은 설득력을 상실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이 위원장의 11월 27일 발언 중 지상파 반대에 대한 부분은 더욱 큰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우선 지상파의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 반대를 ‘반대를 위한 무조건적인 반대’로 치부한 점은 안타깝다. 지상파가 8VSB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서두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이 이러한 합리적인 반대를 단순히 정치적 공세 정도로 치부한 점은 아쉽다.

현시각 기준 11월 26일, 교황 프란체스코는 자신의 저술서인 ‘사제로서의 회개’를 통해 “경제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부유층의 투자·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낙수효과’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잔인하고 순진한 믿음”이라고 설파했다. 국민 편익이라는 말로 유료방송 진흥을 주도하며 특혜를 남발하는 한편, 그 경제적 낙수효과를 강조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전언이다.

“8VSB 허용은 안될 말”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 종편에 직격탄 날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제승인 심사를 앞둔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덧씌우는 방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엉터리 방송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에 대해서도 “이경재 위원장이 지상파에 도입된 8VSB 전송 방식을 연내에 해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안될 말이다. 종편에 또다시 ‘예정의 메시지’를 던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감도높게 비판했다.

11월 28일 양 위원은 서울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국 2주년을 맞은 종편에게 작정한 듯 쓴소리를 쏟아 내었다. 이에 양 위원은 최근 종편의 보도 방향에 대해 “상식을 뒤집는 얘기를 아무런 근거 없이 하고 있다”고 단언하는 한편, 종편으로 인한 광고시장 혼란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 종편의 사업 계획 변경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여기에 종편이 실패했다는 전제로 그 책임소재를 “1차적으론 당시 집권층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 집권층이 파전한 정부직들도 2차적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하며 “종편 도입에 찬성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이경재 위원장도 지금 자리에 가기까지 종편으로부터 도움받은 걸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유감 표명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는 주장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또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의 경우 “종편 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마지막 고리를 푸는 데도 큰 역할을 해야 할 분이다. 제승인 문제에서도 이 위원장의 방송정책에 대한 합리성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언급

을 하기도 했다.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이 사실상 종편에 대한 특혜라는 인식에도 힘을 실었다. 이에 양 위원은 최근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이 8VSB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언급된 부분에 대해 ‘예정의 메시지’라는 노골적인 단어로 치부했다. 사실상 또 다른 특혜의 연장선상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8VSB 허용은 방송산업발전의 관점은 물론, 중장기적인 콘텐츠 시장에 있어 심각한 악재로 꼽히고 있다. 특정 사업자의 혜택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짝퉁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8VSB 허용은 사실상 케이블 MSO의 다채널 서비스라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근간을 흔드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양 위원의 인터뷰는 이러한 지나친 특혜를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양 위원은 “종편은 비판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활용의 대상이라는 측면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로 비정상 보도를 이어가는 종편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으며 종편 승인과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두고 지금까 “요식행위였다. 사업자 개수, 줄 놔 주며 놓고 구색 맞추기를 한 셈이다”고 비판했다. 또 양 위원은 종편 개국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최시중 전 방통위 위원장의 체제를 ‘신정 정치’라고 정의하기도 했으며 종편의 의무재송신 사안도 과도한 특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양 위원은 “현재 2개 정도의 종편은 시장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말로 소문만 무성한 종편 퇴출 시나리오에 방점을 찍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정부의 방송정책, 철학이 없다”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송규제 혁신 방안 토론회



11월 14일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긍정적인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한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송규제 혁신 방안 토론회’가 11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공공미디어연구소, 유승희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본 토론회는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의 발제와 더불어 김민기 숭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강혜란 여성민우회 정책위원,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한상혁 케이블TV협회 미디어 국장,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이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에 앞서 최동환 한국방송 기술인연합회 회장은 “11월 14일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유료방송 중심의 발전방향을 설정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본 토론회를 통해 긍정적인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를 추구하는 토론의 기회가 열릴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1월 14일

발표된 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계획이며, 당연히 유료방송을 관장하는 미래부의 의견으로 봐야 한다”는 말로 11월 15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이경재 위원장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선긋기 발언을 상기시키는 한편, “사업자 중심이 아닌, 시청자 중심의 긍정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긍정적인 방송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발제에 나선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11월 14일 정부 계획을 “사업자 이해관계의 난무와 철학의 부재”로 단언했다.

동시에 조 소장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사업자 간의 빅딜을 유도한 것이라면, 이러한 의도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방송정책은 철학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소장은 지상파 방송을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단어보다 무선방송이라는 단어로 전제하며 “무선방송의 형해화 관점으로 사안을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조 소장은 케이블 8VSB 허용에 대해 “지상파 MMS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정리했다. 케이블 8VSB 허용이 사실상 케이블 다채널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지상파 MMS와 상충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동시에 조 소장은 FULL HD 20, HD 20, SD 20개 채널을 240MHz 폭으로 묶어 기존 360MHz 폭

중 120MHz 폭을 케이블 UHD 용도로 활용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으로 시청권 보장을 추구하기보다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지상파에 할당해 근본적인 난시청 해소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상파 MMS에 대한 부분은 8VSB 허용과 묶어 설명했다. 우선 조 소장은 지상파 MMS는 면허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영-민영의 구분도 명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조 소장은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이 지상파 MMS 허용과 맞물릴 경우, 지상파 MMS는 그 의미가 사라진다는 점에 주목해 “지상파 플랫폼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동시에 조 소장은 “유료방송이 지상파 MMS 채널을 모두 수용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파 MMS는 직접수신을 제고와 연결해 고려해야 한다”는 말로 8VSB 허용에 따른 지상파 MMS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 그리고 지상파 MMS의 전제 조건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정리하자면, 지상파 MMS와 8VSB 허용은 같은 연장 선상에서 다른 두 개의 플랫폼 존재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연 어떤 플랫폼이 더 긍정적인 요인을 갖는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3면에 계속)

최진홍 rgdsz@kobeta.com

지상파 DMB 시대 부활하나?

개국 8주년을 맞은 지상파 DMB가 본격적으로 고화질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속적인 매출 하락으로 고사 직전에 놓인 지상파 DMB가 고화질 서비스를 발판삼아 화려한 부활을 선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화질 DMB 서비스로 재기 발판 마련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SBS, KBS, MBC가 순차적으로 고화질 DMB를 송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국DMB를 시작으로 8월 YTN DMB에 이어 이번에 지상파 3사가 합류함에 따라 본격적인 고화질 지상파 DMB 시대가 열린 것이다.

KBS 기술연구소와 (주)카이미디어가 공동 개발한 고화질 DMB 서비스는 화소수를 기존 DMB 대비 4배로 늘려 화질이 크게 개선됐다.

기존 320×240(QVGA급)의 화질을 SD화질에 준하는 640×480(VGA급)으로 개선한 것이다.

고화질 DMB 서비스는 화질 개선뿐만 아니라 기존 DMB 방송망 자체에는 변경을 주지 않는 방식을 채택해 기존 DMB 수신자의 시청권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KBS 기술연구소와 (주)카이미디어가 공동으로 개발한 SVC 기술은 고화질

DMB의 핵심 기술로 영상신호를 압축할 때 기본 스트림과 화질개선 스트림으로 나누어 발생시키고 수신기가 두 스트림을 각각 수신해 결합하는 방식으로 기본 스트림을 DMB망으로 방송하고 화질개선 스트림은 통신망으로 전송한다. 화질개선 스트림을 통신망으로 수신하면 이동 중에도 고화질 DMB 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며, 고정 네트워크인 Wi-Fi 망으로 수신하는 경우 무료로 고화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화질 DMB, 돌파구 될 수 있을까?

이 같은 고화질 DMB 서비스는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 대접을 받았던 지상파 DMB 방송이 무료 방송 서비스라는 수익구조의 한계를 넘지 못한 채 계속 내리막길을 걷자 업계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준비한 것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36억 원의 광고매출을 기록했던 지상파 DMB가 올해(2013년 9월 기준)는 80억 원 수준의 광고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다. 3년 사이에 광고매출이 약 3분의 1까지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지상파 DMB가 보유한 역량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최근 한국광고주협회의 조사 결과도 지상파 DMB의 잠재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방송을 시청할 때 지상파 DMB를 이용한다. 이는 곧 지상파 DMB가 플랫폼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시청자 복지 차원으로 지상파 DMB를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상파 DMB 업계는 매출의 청신호를 기대하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티빙이나 올레TV, POOQ(폭) 등의 N-스크린 서비스는 모두 유료형 서비스라는 단점이 있지만 지상파 DMB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무료 보편의 서비스”라면서 지상파 DMB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 역시 “지상파 DMB는 휴대용의 무료 보편적 매체로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 재난상황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7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 지상파 DMB 시장이 그동안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화질 문제 개선과 정치권의 지지 속에 다시 한번 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 마디

“8VSB 허용에 지상파 반박 어려울 것”(이경재 방통위 위원장)
 ⇨11월 27일 방통위 기자 간담회에서...정정합니다. 8VSB 허용에 지상파하고 싶은 말 엄청나게 많을 것!

“정부가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하겠다는 것은 공공재의 무리한 민영화를 주도하는 것이다”(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
 ⇨11월 28일 국민행복 700 플랜 토론회에서...정당합니다만, 공공재를 사유화하려는 의도는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것임니다.

유료방송 합산 점유율 도입해야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1월 19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및 상생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의 화두는 유료방송 시장 소유경영 규제 관련 쟁점에 집중되는 분위기였다. 발제를 맡은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료방송 시장의 소유경영 규제의 비대칭성과 불완전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불공정 경쟁이 유발되고, 향후 방송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방송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소유경영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합산 점유율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33%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다소 도발적인 제안도 등장했다. 현재 KT는 IPTV 특별법을 통해 해당 시장의 점유율 규제 제한을 받지만 위성방송은 점유율 제한이 없다. 그런 이유로 이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며, 자연스럽게 KT와 反KT 전선도 고착화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KT 계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3%를 제한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토론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현실적인 문제가 켜다. 정인숙 가천대학교 교수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산할 경우 이미 33%에 거의 도달했다”며 “이종매체의 가입자 합산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규제다”고 반박했다. 무리하게 한 사업자의 이종매체 제한을 실시할 경우 소비자 복지 측면에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는 “소유경영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의는 경제학적 측면이 아니라 방송의 다양성 측면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주옥 Kjo5554@kobeta.com

방송기술저널 창간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최동환	편집주간 김성훈
편집위원 김윤중 서상원 장진영	송주호 박명석
편집장 최진홍	취재기자 백선하 이진범 김주옥
기획실 강동균	인쇄인 성진&화성프린팅
주소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전화 02-3219-5635	팩스 02-2647-6813
트위터 @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5	

또 다시 거리로 나선 ‘언론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 결의대회



지난해 총파업을 벌였던 언론인들이 1년 6개월여 만에 또 다시 거리로 나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무런 성과물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론의 정상화를 기대했던 언론인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의 손으로 해결하겠다”며 또다시 투쟁의 깃발을 들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언론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보장, 해직 언론인 복직, 8VSB 종편 특혜 저지, 언론 공공성 사수 등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섰다.

언론노조는 “원칙은 무너졌고, 신뢰는 깨져버렸으며, 상식은 사라졌다. 더 이상의 기다림은 없다”며 “언론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추악한 횡포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총력투쟁뿐”이라

고 선포했다.

이들은 “지난 MB정권 5년 동안 철저히 훼손된 방송 공정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권 차원의 약속으로 어렵게 출범한 방송공정성특위가 어제 종료됐다.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며 “의지 없는 여당과 능력 없는 야당이 피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우리의 언론현실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끝도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출범한 방송공정성특위는 당초 9월 말로 활동을 마치게 되어 있었으나 여야가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자 활동기간을 2개월 더 연장했다. 그러나 기간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지난달 28일 활동을 종료했다. 여야는 합의하지 못한 내용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넘겨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지만 당장 여야의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면에 이어)케이블-위성방송의 해묵은 논쟁의 중심인 DCS에 대해서는 다소 과격적인 제안이 나왔다. 조 소장은 정부의 DCS 도입이 궁극적으로 플랫폼으로서의 위성방송을 해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DCS의 도입이 위성방송 OTS 상품(HD 다채널+주문형 VOD 서비스 결합)과 KT의 IPTV인 OTV의 차이를 더욱 희석시켜 OTS가 오히려 KT의 IPTV 성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발로된 것이다. 여기에는 DCS 도입으로 인한 종합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인 KT의 시장 지배적 위치 공고화가 핵심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조 소장은 “위성방송을 사업자 공동의 플랫폼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전제된다면 굳이 위성방송의 시장점유율 제한을 도입할 필요가 없지만, KT의 배타적 지배를 방지한다면 KT가 관여하는 모든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제한이 신속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소장은 KT의 망과 플랫폼 이원화 사업이 계속된다면 플랫폼 면허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UHD 프리미엄 콘텐츠 육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했다. 조 소장은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 (120MHz에 상당하는 주파수 절감 효과를 통해) 케이블 UHD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지만 지상파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조 소장은 정부의 계획안이 시청자의 유료방송 수신료 인상을 감안한 부분인 있다고 강조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UHD 발전의 주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에 방점을 찍었다. 또 지상파 중간광고 및 광고 총량제에 대한 부분은 유보적인 판단을 내리며,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재원지원 보다는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업 포함 등 간접적인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 소장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기준 일원화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을 명확히 했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완화는 지역 SO의 인수합병을 촉발시키는 요인인 만큼 자연스럽게 지역성 매물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으며 지역성 강화의 매개로서 RO의 재발견과 동시에 케이블 SO의 지역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가 종료되고 패널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정부는 결국 지상파가 PP의 역할만 수행하라고 종용한다”고 전제하며 “UHD는 방송의 진화적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지상파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8VSB는 명백한 종편특혜인 만큼 명확한 선 긋기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상파 MMS에 대해서는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발전의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을 비롯한 ‘언론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공정성특위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혁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특별다수제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해 최소한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지키자는 것인데, 정치권은 이마저도 끝내 거부했다”며 “상임위에서 다시 신속히 논의되고 연내 법제화될 수 있도록 투쟁의 끈을 팽팽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우리는 언론노동자다.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사명이 부여돼 있다”며 “무원칙, 불신, 비상식과 맞서 싸우는 것이 이 땅의 언론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투쟁의 전선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해직 언론인 전원 복직과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위한 제도적 보장 장치 확립 △8VSB 등 종편 특혜, 미디어 사유화 등 정부의 미디어생태계 파괴 정책 강력 저지 △언론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 사수와 민주주의 퇴행 저지 등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끝장농성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이어 한상혁 케이블TV협회 미디어 국장은 8VSB 허용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클리어콧 TV와 8VSB 허용은 시너지 효과를 만든다”는 전제로 “고객을 위한 미디어 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8VSB 허용을 발달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시청권 보장의 일환으로 8VSB 허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한 국장은 종편특혜라는 대목에 이르러 “8VSB 허용은 종편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며, 미래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혜란 여성민주회 정책위원은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 직접수신환경은 상당히 개선되었다”며 “시청자의 입장에서 방송환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사업자의 절실함은 이해하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낮은 직수율 문제와 유료방송의 시청권 확보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총정리의 개념으로 “정부의 계획안은 철학이 없는 것이 확실하며, 특히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은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프리미엄 UHD 정책 추진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는 말로 발언을 끝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방통심의위, ‘추적60분’에 중징계 내려

“방송심의규정 문제 많아 … 개정 필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다룬 KBS <추적60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고는 방통심의위 제재 중 과징금과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 7일 방송된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은 북한에 거주하다가 탈북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국인 유모씨가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다뤘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국정원은 유씨의 여동생으로부터 받은 진술을 근거로 삼아 유씨를 기소했으나 나중에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의 협박과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유씨는 8월 22일 법정에서 간첩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제는 방통심의위 산하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가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방송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측의 입장만 대변해 제9조를 위반했고, 동시에 제11조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심의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현재 검찰이 항소 계획을 밝히는 등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입장 위주로만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도 담겨 있다”며 전체회의에서 경고를 의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모두 ‘문제없음’을 주장했지만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의 열세에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권혁부 부위원장은 “판결이 있기 전부터 무죄를 전제로 취재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편향적이다. 재판이 이러한 언론의 여론 재판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제재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력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추적60분> 중징계 철회하고, 여당 추천 위원들은 사퇴하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방통심의위가 말하는 ‘공정성’은 오로지 국정원이 정권의 도구로 악용당하는 구린내 나는 현실을 감추려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운운하며 중징계를 내린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정권의 방송장악에 의해 이미 고사된 저널리즘에 대한 확인사살”이라며 “<추적60분>을 중징계하고 정권의 충견노릇에 앞장선 여당 추천 위원들은 당장 사퇴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PD연합회는 방통심의위의 전체회의가 열린날 11월 21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KBS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방통심의위가 언론의 비판적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언론노조는 “그동안 수차례 방송심의규정 제9조와 제11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방송심의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9조는 방송별 상 보도와 논평에만 적용이 가능한데 방통심의위가 지속적으로 <추적60분> 같은 탐사 프로그램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제11조의 경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언론노조 측은 이어 “우리 사회 상당수 이슈들 모두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혹은 개별적인 민사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데 심의규정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보도·시사 프로그램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며 방통심의위의 정치심 의, 표적심 의, 과잉심 의는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이처럼 <추적60분> 중징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와 제11조의 폐기 및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통심의위에 중징계를 받은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은 인권운동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수여하는 제16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했다. <추적 60분>의 이번 수상은 통일언론상, 이달의 PD상에 이은 세 번째 수상으로 시상식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백선하 baek@kobeta.com

세계는 디지털 전환중…우리는?

ITU, “55%가 디지털 TV 시청”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11월 21일 세계 텔레비전의 날을 맞아 해 보도자료를 내고 전 세계 가구의 55%가 디지털 TV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ITU는 2008년 30%에 불과했던 디지털 방식의 TV 수신이 2012년에 50%를 넘었으며 선진국은 디지털 TV 수신율이 81%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개발도상국, 신흥국들도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4년 동안 디지털 TV 수신율이 4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ITU에 따르면 적어도 전 세계 약 14억 가구가 1개 이상의 TV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국내의 디지털 전환도 관심을 받고 있다. 2012년 12월 31일 전국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디지털 TV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료방송도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 등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고화질에만 매몰된 비정상적인 디지털 미디어를 타진하고 있는 부분은 부담이다. ITU의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의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은 광범위한 전 세계적 디지털 전환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한편 ITU는 2012년 기준으로 유료방송 가입 가구 수가 7억2,800만(전 세계 시청자 기준 53%)에 달해 기존의 무료방송에 비해 아슬아슬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집계했다.

또 IPTV의 경우 기존 유료방송의 강자인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정체와 비교해 기존 4배에 달하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TV를 보유한 가구 수의 5%에 불과하다는 추가자료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ITU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중국의 PP 라이브 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한 TV 방송의 전달도 보편화하면서 많은 TV 방송국이 TV나 비디오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다운을 받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고 조사했다.

하마돈 푸레 ITU 사무총장은 “디지털 TV는 원격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전달하면서 매우 가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라고 강조하며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 방식으로 TV에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점차 우리의 목표인 스마트한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의 중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클리어콧 기능 추가” … “짜통 디지털 전환 우려”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지원 사업 시작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이달부터 디지털 TV를 시중보다 70% 정도 싼값에 구입할 수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디지털 TV는 클리어콧 기능이 추가된 TV로 셋톱박스 없이 TV만으로도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클리어콧 기능 자체가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이기에 진정한 디지털 전환은 아니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시청각장애인 등의 저소득층 중 디지털 TV가 없는 약 197만 가구를 대상으로 디지털 TV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소득층 등 디지털 TV 보급지원 사업’을 12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디지털 TV의 가장 큰 특징은 지상파 방송 수신기능 외에 디지털 케이블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클리어콧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매자들은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 TV만으로도 디지털 케이블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미래부는 디지털 TV 보급지원과 함께 시청가 능한 다양한 디지털 방송 매체에 대한 안내 및 후속절차에 대한 지원도 제공해 신청자가 최소의 부담으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상파 직접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디지털시청100%재단과 협조해 수신안테나를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과거 지상파 방송이 아날로그로 전송되던 시기에는 화면 겹침·퍼짐이 발생하는 등 난시청 지역이 많았으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형안테나 설치만으로도 깨끗한 방송 수신이 가능해 현재 대다수의 직접수신가구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부는 이번 사업으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클리어콧 기능이 추가된 TV의 경우 VOD(주문형 비디오) 등 양방향 기능은 없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셋톱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클리어콧 도입 당시 관련 업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디지털

방송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양방향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홈쇼핑 송출도 문제로 떠오르면서 클리어콧 TV는 여전히 논란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클리어콧 채널 구성에 홈쇼핑 채널이 포함되면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클리어콧 TV 도입으로 8VSB 진입장벽도 한층 낮아질 것이라 전망이 나돌고 있는데 이 같은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으로 는 진정한 디지털 전환의 장점을 소비자들이 누리지 못할 것”이라며 미래부의 유료방송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어콧 TV 보급이 확정된 만큼 관련 전문가들은 “클리어콧 도입만으로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만큼 최근 종편 특혜로 언급되고 있는 8VSB 방식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8VSB마저 허용되면 방송 생태계 자체가 파괴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2013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세퀘이아홀에서 '2013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는 소통의 자리인 동시에 지난 1년 간 방송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을 대상으로 '방송기술대상'을 시상하는 자리다.

최동환 연합회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연합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후의에 감사하다"면서 "1988년 제정된 이후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방송기술대상은 매년 빠르게 변하고 있는 방송 환경 속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방송기술 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방송기술인의 자긍심을 크게 높인 이들에게 수여되고 있는 만큼 많은 방송기술인들이 꼭 참석해 자리를 빛내달라"고 당부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성과 없었다 11월 28일 종료



국회 방송공정성특위가 11월 2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을 종료했다. 하지만 2개월 연장을 포함해 총 8개월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특위위원의 가시적인 성과물은 전무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물론 여야는 합의하지 못한 내용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넘겨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해당 안건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어려워 특위를 조직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승적인 합의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번에 특위가 채택한 보고서에는 KBS·EBS 이사 결격사유, KBS 사장 인사 청문회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결격사유, 방통위·방통심의위 속기록 의무화 법률 규정, KBS·EBS·방문진 속기록 공개(비공개 시 합당한 사유는 법률로 제한), 방송의 보도제작 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송사 내 편성위원회 노사동수 추천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해직 언론인 여야 결의문도 약식오나마 처리되어 기본적인 체면치레는 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중 특별다수제와 이사 증원 및 여야 추천 조정은 제외되었다. 또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한 결격사유도 포함되지 않았다.

해직 언론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부분도 문제다. 당장 11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민주당)이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점과 언론사의 노사와 관련해 정부부처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는 부분을 결의문에 넣으려고 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노사 자율이 1차적이고 해결이 안 될 때 2차적으로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봐야 한다"며 "문구를 적으려면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촉구를 한다'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특위가 특별다수제 등 핵심적인 사항이 누락되고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확실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의 경우 지도부 무기한 투쟁을 선포하며 11월 29일 총력투쟁을 천명하는 등 실행행사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특위가 성과 없이 종료된 것을 두고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이다. 특위 활동 당시 새누리당은 전문자문단의 방송법 개정안 요구를 무시하는 한편 단 하나의 의견도 발의하지 않았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기 때문이다. 여당도 여당이지만, 야당의 경우 특위 활동을 정치적 협상대상으로 삼아 전사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후 엄청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해직 언론인 문제, 인간적으로 공감?

공정방송 복원 및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총력투쟁이 수도권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며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방송인총연합회가 국회 방송공공정성특위 종료 직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공정방송공정성특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을 만났다. 이에 11월 19일 홍진표 방송인총연합회 회장(한국PD연합회 회장)과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김유석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박건식 한국PD연합회 수석부회장, 김광선 한국PD연합회 정책국장, 황주성 방송기자연합회 과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조해진 의원실에서 '방송인총연합회 해직자 복직을 위한 서명지'를 전달했다. 본 서명지는 방송인총연합회에 소속된 방송인들이 해직자 복직을 청원하며 작성한 연명 서명지다.

이에 방송인총연합회는 조해진 의원의 면담을 통해 여당이 해직 언론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역할론을 주문했다. 홍진표 방송인총연합회 회장은 "공정성 특위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해직 언론인) 문제는 반드시 풀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 정권에서 대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역으로)

그런 면에서 해직자 문제는 중요한 사건이다"고 단언했다. 또 김유석 방송기자연합회 회장도 "국회의 방송공정성특위가 얼마 남지 않았다. 2주 동안 유의미한 결론을 찾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자 조해진 의원은 "공식적으로 해직자 문제를 상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여야 모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특위 위원장(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움직여 보겠다. 어찌 됐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면집자 주-해당 면담은 특위 종료 직전에 성사되었음)**

해직 언론인 사태가 정치적 쟁점에 매몰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현 정부가 들어서며 많은 이들은 (공정방송 복원 및 해직 언론인 문제에 있어) 전 정권과 다를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적어도 언론인 해직자 복직 문제는 공론화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전하며 "그러나 현 정부는 MB보다 더 하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아직 늦지 않았다. 충분히 해직 언론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해진 의원은 MBC의 경우 사측이 노조

에 가입류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해직 언론인 지원을 막고 있으며 해결방안도 요원하다는 지적에 "(종합적으로 말하면) 청와대가 이 문제만을 붙잡고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청와대가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를 쥐고 앉아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더 나아가 조 의원은 "(해직 언론인 문제에 대한) 여론의 분위기는 인간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해결되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만 정치적으로는 방송 전반이 노조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방송 복원을 위한 일련의 행동을 단 순하게 사측과 노조의 힘겨루기로 재단하는 한편, 최근 있었던 김중국 MBC 사장의 노조에 대한 언론노조 탈퇴 종용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방송사 파업 이후 사측에서 해직 언론인 문제를 해결하면 내부의 정치적 분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 노조에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안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해직 언론인 문제가 방송사의 정치적 내분을 더욱 촉발시킨다는 해석으로 보인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지상파 시청 가구 97.7%, “만족” 유료방송 시장 포화

지상파 방송을 직접수신하는 가구의 절대 다수가 현재 시청환경에 만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료방송에 가입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월 2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2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서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이를 심층 분석한 '유료방송 비가입가구의 방송매체 이용 행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2012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결과 산출된 직접수신가구 8%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8%에 해당되는 직접수신 가구 중 97.7%가 앞으로도 유료방송에 가입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보고서가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및 각종 공시청 설비 데이터를 참조하지 않은 관계로 '2012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의 직접수신율 8%를 기준으로 삼은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최소한 직접수신가구의 시청 환경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기존 주장의 근거로는 손색이 없어 보인다. 동시에 유료방

송 시장이 그 만큼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점도 부각될 전망이다.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던 유료방송 내부의 시장주도권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진다는 결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만 시청하는 가구'의 하루 TV 이용시간은 141.1분으로 유료방송 가입가구보다 약 30~40분가량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의 TV 이용시간은 176.2분,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는 181.1분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위성방송 가입자는 173.9분, IPTV 가입자는 169.8분으로 나타났다. 또 지상파만 시청하는 가구의 경우,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상파 방송으로 충분해서"라는 응답이 조사대상의 67.8%(비가입유형 합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을까봐'(12.5%), '가입비·이용료가 비싸서'(10.6%), '불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서'(4.2%)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직접수신가구의 평균 TV 시청 시간이

유료방송 TV 시청보다 낮은 사실과 직접수신가구의 12.5%가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을까봐'로 답한 부분은 일정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지상파 직접수신가구 중 독신가구의 비율이 26.7%에 달해 유료방송의 독신가구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상파만 시청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소득 수준은 200만 원 미만인 42.9%, 200~400만 원 34.1%, 400만 원 이상 20.5%로 조사됐고 타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200만 원 미만 가구 비율은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가구가 46.4%, 위성방송 가입가구 41.5%로 나타나 유료방송 가입 여부와 소득의 상관관계는 알려진 바와 다르게 큰 영향이 없다는 분석도 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요금 인상 가능성, 지상파의 MMS도입 등 방송 환경의 변화 과정에서 지상파 TV만 이용하는 가구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향후 이를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료방송 시장의 양적팽창 시대가 끝나가고 있으며, 직접수신환경이 그 자체로 막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 분석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단신 뉴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앞으로는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관리·운용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단독에서 미래부 장관과 공동 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을 개정기로 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방송법에 따라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어 방송위원회가 운용해 오다가 2008년 2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방통위가 운영을 담당한 이후 2010년 3월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과 전파법에 따른 징수금,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등의 분담금,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기금 운용의 수익금,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투자 및 출자사업 지원 근거도 정비했다.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투자나 출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기금의 용도 내에서 투자 및 출자'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은 앞으로 KBS나 EBS에 대한 출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KBS나 EBS에 대한 명확한 출자 근거가 없어 지원을 놓고 다소 혼신을 빚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EBS에 대한 출자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법에서 정한 용도대로 써야 한다. 그런데 EBS에 대한 출자의 경우 법과 시행령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시 해석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석상 혼란을 없애기 위해 고시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전파방송 산업의 최대 축제인 2013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렸다.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은 '전파로 열리는 창조경제, 전파로 누리는 국민행복'이라는 슬로건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RAP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전자파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다.

이진빈 jnb1001@kobeta.com

SBS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이용모 보도본부장이 임명됐다. SBS는 지난달 28일 주주총회를 열어 12월 1일자로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이용모 보도본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본부장은 TBC, KBS를 거쳐 지난 1991년 SBS 창사 당시 합류해 보도국 8시뉴스 담당 부장, 제작본부 국장급 교양총괄CP, SBS아트텍 대표이사 사장, 방송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우원길 현 사장은 SBS미디어홀딩스 회장 보좌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백선하 baek@kobeta.com

한국방송협회는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간접광고를 자율적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간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19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방송을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정 제품이나 기업 로고 등을 15초 이상 노출할 수 없고, 제품의 상표나 로고 등이 화면의 1/4을 덮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특정 제품명을 언급하거나 화면으로 특정 제품을 노출할 경우 원래 제품에 부착된 것 외에 별도로 인위적인 로고를 덧붙일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KBS·MBC·SBS 등의 지상파 방송사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정부 및 유관기관,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등 광고현업 종사자,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간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 추진 연구반'이 도출한 내용이다.

앞서 지난 7월 한국방송협회는 연구반 운영 계획을 밝히며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의 간접광고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유해상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품목의 금지 원칙 및 매체의 편집 자율성이나 독립성 불가침 원칙 등 큰 개념의 규제 원칙이 있으나, 프로그램의 내용과 밀접히 맞물려 진행되는 간접광고의 특성 상 대부분 방송사가 정하는 자율적 세부 기준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방송사와 정부, 관련 업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공동으로 참여해 추진하는 만큼 해외의 사례보다 더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접광고는 지난 2009년 9월 합법화된 이후 보도 및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필수요소가 되면서 새로운 수익 청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맥락과 상관없는 지나친 등장 등으로 방송 프로그램 몰입에 방해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간접광고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간접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접광고의 본래 도입 취지 즉 음성적으로 형성된 간접광고 시장을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지는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 개선과 관련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방송협회는 "실무현장에서 구체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작업이 진행되면 앞으로 자율 규제 질서가 더 단단하게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지상파 방송사들이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중간광고를 하루빨리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류 콘텐츠 주역인 지상파 방송사들이 한류 열풍에도 불구하고 제작비 급증과 광고수입 정체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적자 상황은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비는 지난 2002년 2조7,174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비는 2조 1,830억 원으로 2002년에 비해 19.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광고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차지하는 점유율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점유율은 22.3%로 지난 2002년 39.4%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방송협회 측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영업이익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지난해 KBS와 MBC, SBS의 영업이익은 모두 합쳐 179억 원에 불과했으며 올해는 적자까지도 예상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줄어드는 광고수익에 반해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점점 상승한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기획의 대형화, 캐스팅 비용의 상승, 특수효과의 활성화 등이 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하루빨리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들은 "시청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지만 중간광고는 34개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까지 일반화되어 있는 광고 형태"라며 "이미 케이블과 위성, 종합편성채널 등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 중간광고가 허용되고 있는 만큼 공정경쟁의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시종일관 강조해오고 있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이 중간광고 부분에서도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I 지상파의 UHD 전략을 해부한다(下)

지상파 방송 중심의 UHD TV 발전을 전제로 하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전략, 국민행복 700 플랜이 공개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해당 플랜의 상세한 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을 전편에 이어 연재한다.

4. 지상파의 UHD 로드맵

지상파 방송사의 구체적인 UHD 로드맵은 무엇일까? 이에 '국민행복 700 플랜'은 총 4단계의 발전계획을 제안한다. 우선 준비기(2014년 이전)다. 준비기에는 지상파 UHD 실험방송에서 시범방송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700MHz 대역 주파수 확보를 전제로 표준방식도 결정한다. 사실상 서비스 준비 단계로서 커버리지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추정예산은 283억 원이며 특선 다큐멘터리 및 단막 드라마를 중심으로 UHD 편성비율을 구성한다는 복안이다.

도입기(2015~2019년)에는 인구대비 80%의 커버리지를 구축하며 수도권과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실내수신이 가능한 단계로 UHD 역량을 끌어 올리는 한편 추정예산은 3,539억 원이 예상된다. 다큐멘터리와 UHD 드라마 및 예능, 극장용 UHD 콘텐츠를 3~40%로 끌어올리며 2016년 리우 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잠재력을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확장기(2015~2024년)에는 전국으로 UHD 플랫폼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동수신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커버리지 95%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실시하는 부분이 특기할 만하다. 추정예산은 7,033억 원이며 이 단계에 이르러 지상파 UHD 스튜디오 확대 및 모바일 콘텐츠 40~90%를 계획하고 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계기로 성장동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완성기(2025년 이후)에는 HDTV가 종료되고 채널재배치를 전제로 해당 주파수 반납을 실시한다. 동시에 4k에서 8k로의 전환을 추구하며 이 단계에 이르러 커버리지 인프라는 100%를 목표로 한다. 자연스럽게 난시청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제작되는 콘텐츠도 90% 이상 UHD로 만든다는 목표다.

동시에 국민행복 700 플랜은 이러한 단계별 발전계획을 강조하며 촬영장비, 편집장비, CG, 모니터를 교체하고 저장장치 및 송신 인프라, 스튜디오 시설, 조명 및 음향 시스템을 UHD에 맞게 확장해 10년간 총 1조1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UHD 콘텐츠에는 2025년까지 총 7조 원을 투자하며 2014년부터 2025년까지 UHD 편성비율을 90% 이상 신장시킨다.

구체적인 지상파 UHD 서비스 모델도 나왔다. 우선 1단계는 안정적인 초고화질 실감방송을 전월만 연결하면 즐길 수 있는 시청환경을 구축하며 2단계에 이르러 인코딩 성능 개선 및 MINI 기술을 활용해 이동방송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8k로의 확장을 목표로 일본을 비롯한 UHD 선진국과 본격적인 경쟁구도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5. 700MHz 대역 주파수, 그 양면성

지상파 UHD TV를 위해서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지상파가 할당받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국민행복 700 플랜의 기본논리였다. 그렇다면, 700MHz 대역 주파수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할까? 방송일까? 통신일까?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있어 방송의 라이벌인 통신의 허구부터 짚어보자.

우선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은 통신사의 주파수 확보 현황 및 비교분석자료다. 미국과 단순 비교하자면, 미국 통신사인 버라이즌은 11,00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AT&T는 10,500만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통신사인 SKT는 2,700만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KT는 1,700만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버라이즌과 AT&T는 국내 통신사에 비해 엄청난 숫자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통신사 주파수 보유량을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버라이즌은 110MHz, AT&T는 90MHz 폭을 보유하고 있지만 SKT는 155MHz, KT는 135MHz 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통신사들이 국내 통신사보다 훨씬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파수는 더 적게 가지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바일 트래픽 관리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 통신사들은 1~2차 주파수 경매를 통해 이미 막대한 주파수를 확보했으며, 더 이상의 주파수는 필요 없다는 점을 광고로 통해 증명하기도 했다.

6. 파급효과를 본다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해당 주파수가 할당된다면 어떤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통신이 700MHz 대역 주파수를 할당해 달라는 기본적인 논리이기도 하다. 과연 진실은 어떻게?

우선 통신에 700MHz 대역 주파수가 할당된다면, 당장 주파수 경매 대금으로 3조 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여기에 가입자 평균 이용요금을 5만 원으로 가정하고 10년간 예상 매출을 잡아보면 약 80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단말기 구입 분야에서 약 89조 원까지 합하면(휴대폰 교체주기를 1.5년으로 산정) 대략 172조 원이 통신에 700MHz 대역 주파수를 할당했을 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라는 결과다.

그렇다면 방송은 어떻게? 우선 방송에 해당 주파수가 할당되면 주파수 경매 대금은 0원, 이용 요금도 당연히 0원이다. 하지만 단말기, 즉 TV 수상이 교체주기인 6년을 가정하면 83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며, 여기에 콘텐츠 제작 투자비용 5.5조 원(2022년까지 지상파 UHD 콘텐츠 투자비용 산정), 콘텐츠 수출 2.2조 원+알파(한국콘텐츠진흥원의 평균치 산정), 문화 및 관광 수익 유발효과 106조 원+알파를 합하면 196.7조 원+알파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다르게 통신보다 방송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더욱 높다.

그렇다면 통신의 계산방식으로 방송의 가치를 판단하면 어떻게. 통신사 1인당 월데이터 용량을 3.8GB로 잡으면 지상파는 HD 기준 728GB, UHD는 2,912GB로 환산이 가능하

다. 즉 같은 주파수를 할당했을 때 지상파 방송사는 더욱 막대한 데이터를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통신사는 46,096원이지만 지상파는 HD 기준 4,510,112원이고 UHD는 17,928,608원이다. 방송이 일반 국민에 막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그 무형의 창출가치를 더욱 상승시킨다는 결론이다. 이는 단순금액으로 산정해 내린 결론으로 볼 수 있다.

UHD TV 및 장비 시장 매출 효과도 따져봐야 한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UHD 예상매출은 가파르게 상승해 2020년에는 15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의 UHD TV 예상매출도 2020년 45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고부가가치 사업의 정점을 찍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 방송이, 지상파가 UHD를 운용하게 되면 한류 콘텐츠의 성장과 이에 따른 문화적 파급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결론] 국민행복 700 플랜의 2안, 부족하다

지상파 방송이 UHD를 해야 하는 당위성은 다양한 영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문화적-사회적 파급부터 역사적 흐름, 그리고 세계의 추세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 700 플랜의 등장을 마냥 반길 수 없는 부분은, 부족한 주파수를 전제로 쥐어 짜듯이 지상파 UHD를 하겠다는 그 '용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플랜의 '2안'으로는 제대로 된 지상파 UHD TV를 시작할 수 없다.

또 주파수 회수를 전제로 하는 차용의 성격으로는 지상파 UHD TV를 올바르게 구축할 수 없다. 이러한 필수조건을 명확히 하며, 궁극적인 UHD TV의 발전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내부의 유료방송 중심 UHD TV 발전이 지양되어야 하며, 700MHz 대역 주파수가 방송에 할당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최진홍 rgdsz@kobeta.com

I 아리랑 TV – 방송의 경계를 넘다



2012년 전 세계 1억 수신가구를 돌파한 아리랑 국제방송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종합 미디어 방송사이자 K-pop의 전초기지, 한류 콘텐츠의 최전선이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출장 당시 현지 호텔에서 방송되는 아리랑 TV의 매력에 흠뻑 젖었듯이, 지금도 아리랑 국제방송은 세계를 향해 진화하고 발전하며, 새로운 영역의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전 세계 188개 나라로 생방송되는 After School Club은 아리랑 국제방송이 자랑하는 '킬러 콘텐츠'다. 11월 20일 본지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인기 정상의 걸그룹인 miss A가 출현해 세계 각지의 팬과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방송으로 거듭나는 아리랑 국제방송의 역량이 그대로 느껴지는 대목이다.

After School Club은 실시간 영상통화와 SNS를 통해 K-pop에 열광하는 팬들이 직접 스타와 만나 소통하는 국내 유일의 리퀘스트 뮤직쇼다. 프로그램에 진행되며 트위터와 구글 행아웃을 통해 스타에게 궁금한 질문을 하면 바로 스타가 직접 응답을 하고, 구글 행아웃을 이용해 전 세계 팬들과 스타가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 짧은 만남을 갖는 특이한 방송구조를 가지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하여 구글+행아웃을 통한 한국의 K-POP 가수들과 5대양 6대주에 퍼져 있는 K-POP 팬과의 LIVE 영상통화, 영상통화를 방송의 MAIN SIGNAL로 처리하기 위하여 방송기술과 뉴미디어 엔지니어들이 솔루션을 구성하여 SNS를 이용한 미디어 플랫폼을 방송에 적용한 부분이 이채롭다.

최진홍 rgdsz@kobeta.com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송규제 혁신 방안 토론회의 ‘문제’

11월 14일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긍정적인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한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송규제 혁신 방안 토론회’가

11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하지만 당시 토론회 참석자들은 8VSB 허용에 대한 근시안적 결론에 사로잡혀 제대로 된 대안을 도출시키지 못했다.



11월 14일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긍정적인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한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송규제 혁신 방안 토론회’가 11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하지만 정부의 방송정책 철학 부재를 지적하는 토론회 본연의 목소리가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것과 별개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토론회였다.

우선 해당 토론회가 11월 14일 정부의 계획안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걸며, 당시 등장한 계획안이 미래부의 안전이라는 성급한 전제를 아무 문제의식 없이 넘겨 버린 부분은 지탄받아야 한다. 11월 14일 정부의 계획안 발표가 있던 날, 정부는 본 계획안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해 발표한 안이라고 분명히 발표했다. 그런 이유로 해당 자리에서 유료방송 중심의 계획안이 등장하자 패널로 참석한 강혜란 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방통위와 합의한

안전치고는 상당히 유료방송 편향적이다”는 발언까지 한 바 있다. 그런데 다음날인 15일,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은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해당 계획이 방통위와는 협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며, 뒤이어 미래부에서는 이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협의를 된 사항인데 막상 계획안이 발표되자 반발이 심해 방통위가 발을 빼는 것이든, 아니면 정말 방통위가 협의단계에서 미래부에 배제되었든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정부 부처의 혼선과 불통이 상당하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불협화음은 전적으로 정부부처의 잘못이다. 그런데도 11월 25일 열린 토론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이, 그저 “14일 계획안은 미래부의 것이다”는 전제만 서둘러 깔고 시작해 버렸다. 이런 전제를 서둘러 깔아 놓은 상태에서 지상파 측 인사가 “14일 정부 계획안이 유료방송 중심으로 진행된 부분이 문제다”고 발언을 하자 “14일 계획안은 미래부의 의견이며, 미래부는 유료방송을 관장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고 말하는 부분은 무책임한 발언일 뿐이다. 방송정책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논쟁과 소통을 위해 뛰어야 하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불협화음을 서둘러 무시하고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 11월 25일의 분위기는, 대안으로서의 토론회 성격이 시작부터 삐걱거림을 의미한다.

8VSB 허용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11월 25일 토론회에서 단연 화두는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인데 지상파 MMS와 상충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지상파 플랫폼의 근간을 위협하는 내용까지 짚은 것은 커다란 성과다. 하지만 11월 14일은 물론, 25일 토론회에서도 8VSB라는 아이템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보지 않은 것은 패착이다.

우선 11월 14일 토론회부터 보자.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단연코 아니다. 속칭 대안언론이라는 곳에서 11월 14일 정부의 계획안 발표 이후 이해 당사자들의 이질투구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평가한 부분은 정당하다. 하지만 8VSB 허용은 다른 아이템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방송산업발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전의 여지는 있지만 DCS 및 기타 아이템들이 일정 정도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며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8VSB는 단지 ‘선물 보파리’일 뿐이다. 왜일까요?

8VSB 허용은 케이블 MSO(혹은 종편)에 대한 특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디지털 TV를 보유한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에게 고화질 화면을 쉽게 서비스한다는 대의명분도 진정한 디지털 전환과 거리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8VSB와 비슷한 클리어캄 TV를 살펴보자. 1994년 미국 FCC는 클리어캄 TV를 업계 자율화로 개방했다가 2011년 케이블 업체의 반대로 결국 기본채널의 암호화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바 있다. 이는 200여 개의 방대한 채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20~30개 채널을 가진 저가의 클리어캄 TV로 유입되어 콘텐츠의 가격 하락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방향 서비스가 불가능한 클리어캄 TV의 특성상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차지한다고 해도, VOD 서비스를 통한 투자의 선순환 구조도 막혀버리는 것은 치명적이었다.

감이 오는가? 8VSB 허용은 클리어캄 TV와 같이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를 고화질로 구제하기는커녕 짝퉁 디지털 전환의 틀로 묶어 버리며 콘텐츠 시장의 붕괴까지 야기시키는 아

이템이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아이템을 방송산업발전으로 묶는 용기가 가상할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25일 토론회에서 8VSB라는 아이템을 14일 토론회의 연장 선상에서 감론을박한 부분은 어색하기 그지없다. 당시 한상혁 케이블TV협회 미디어 국장이 “8VSB는 디지털 전환으로 가는 과도기에서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장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언급했을 때 미국의 클리어캄 TV 사례처럼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 가입자들을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의 유리벽에 가둔다는 지적을 했어야 했다.

또 한 국장이 8VSB 허용은 종편만의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을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흘러나온 종편 로비설과 그 실체가 드러난 종편 4사 합합 TF의 존재를 언급했어야 했다. 유료방송의 8VSB 허용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케이블임을 밝히며 홀쏬채널과의 채널구성이 변수지만 지상파와 종편이 인접대역에 묵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도 확인했어야 했다. 더 나아가 11월 14일 정부의 계획안에 8VSB 허용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로 11월 25일 대안 토론회가 이러한 점을 부각시켜야 했다.

하지만 당시 토론회 참석자들은 8VSB 허용에 대한 근시안적 결론에 사로잡혀 제대로 된 대안을 도출시키지 못했다. 11월 25일 토론회 말미에 사회를 맡은 김민기 숭실대학교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확실한 비전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토로한 바 있다. 맞는 말이다. 한 번의 토론회로 모든 것을 잡아낼 수는 없는 법이다. 그리고 그 원초적인 단조는 11월 25일 토론회 스스로가 자초한 경향이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700MHz 주파수 할당의 해답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700MHz 대역 주파수는 이러한 흐름과 상관이 없다.”

“700MHz 주파수, 세계적 흐름과 상관없다”

전 세계적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 흐름에 맞춰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강한 반박이 제기됐다.

지난달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

서 (사)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공발연) 주최로 열린 “700MHz 대역을 둘러싼 방송통신의 소모적 대결, 해법은 없는가?”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임재용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위 본부장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전 세계적인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주장이 의미가 있으려면 700MHz 대역 주파수뿐만 아니라 단말기에 들어가는 칩, 사용 방식 등이 다 통용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와 전 세계적 흐름은 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세미나 발제를 맡은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디지털 전환 이후 생긴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다른 나라 정책을 따라간다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주파수의 경우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이러한 발언에 정인숙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는 “세계적 추세가 그렇다고 해서 꼭 따라가야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했고, 엄 본부장은 “전 세계적 흐름이라고 했는데 유럽의 경우 700MHz 대역을 방송에서 쓰고 있고, 중국과 인도 등 몇몇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LTE-TDD 방식을 쓰기 때문에 LTE-FDD 방식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와 전

혀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700MHz 대역 주파수의 전 세계적 통신 활용이라는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역시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700MHz 대역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위한 규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700MHz 대역 주파수 전체와 호환되는 스마트폰 단말기를 제작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FCC의 이러한 움직임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AT&T와 Verizon Wireless의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제작하는 Apple에서는 FCC의 방침에 문제가 많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700MHz 대역 주파수 전 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700MHz 대역 주파수가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에 활용되고 있다는 논리가 억지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KBS 한 관계자는 “각 나라별로 주파수 상황이 다르고, 방송과 통신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역도 다르다”며 “전 세계적으로 700MHz 전 대역을 통신이 활용하고 있다는 통신업계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700MHz 주파수 말고 대안 없다”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이 국제적인 공조와 관계없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 주파수 환경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엄 본부장은 “UHD TV는 기존의 ‘흑백-컬러-SD-HD’를 잇는 자연스러운 방송의 흐름”이라며 “700MHz 대역 주파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방송에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본부장은 이어 “1995년 HD 표준이 정해졌을 때만 해도 HDTV 가격은 1천만 원을 훌쩍 넘었다. 그런데 지금 UHD TV 가격은 당시 HDTV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뿐만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며 UHD TV 상용화 시기는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은 제조사들이 전 세계 TV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UHD TV 상용화는 HDTV 이후 당연한 수순이라는 해석이다.

엄 본부장의 이 같은 설명은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최 교수는 UHD TV의 상용화가 어렵기 때문에 700MHz 대역 주파수는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UHD 상용화 성공을 위해서 값싼 수상기 보급과 콘텐츠 수급이 관건인데 고가의 UHD 수상기 때문에 상용화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수상기 구매를 보조하는 것도 UHD TV가 필수불가결한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

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방송계의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요구 근거가 약하다고 언급했다. 요금 부담 때문에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고가의 UHD TV 수상을 구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방송계가 주장하는 UHD TV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정인숙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는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수상이 가격 인하 등으로 오는 2017년이면 국민 대다수가 UHD TV를 시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며 “700MHz 대역 주파수를 어디에 할당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먼저 따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UHD TV가 방송 발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지상파 방송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에는 관련 전문가들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유료 방송 중심의 프리미엄 서비스가 아닌 지상파 방송 중심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 전문가들은 “UHD TV 같은 경우 지금보다 최대 16배나 화질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HD와 UHD의 차이는 지금 우리가 흔히 느끼는 SD와 HD의 차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방송 자체가 보편적 서비스인 만큼 시청자들이 디지털 정보 격차를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난시청 해소,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

이날 엄 본부장은 UHD TV뿐만 아니라 난시청 해소 역시 700MHz 대역 주파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시청 해소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이미 해결했다”면서 “방송이 통신계의 주장처럼 공짜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다.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방송발전기금을 내고 있고, MBC와 SBS도 매년 사회환원기금을 내고 있다. 이 모든 기금들이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것이다. 난시청 해소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이전에 기금들을 활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도 700MHz 대역 주파수가 방송에 할당돼야 한다는 것이다.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문제의 해답은 간단하다. 전 세계적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고 있더라도 단말기에 들어가는 칩이나 사용 방식 등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꼭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각 나라별 상황에 맞게 주파수 활용 계획을 세우면 된다는 말이다. 게다가 Apple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700MHz 대역 주파수 전 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작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UHD TV의 보편적 서비스와 난시청 해소를 위해선 700MHz 대역 주파수 말고는 대안이 없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제 정부에서 결단만 내리면 된다.

백선하 baek@kobeta.com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700MHz 대역 주파수, 공익만 보자

주영모 호서미디어진흥원 연구위원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두고 말들이 많다. 방송과 통신의 전경이 이어지지만 안정행정부 등 다른 진영의 눈초리도 매서울 지경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로에게 악감정만 남은 이전투구만 남을 것 같아 불안하다. 방법이 없을까?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논하기 위한 방송과 통신 양 진영은 각각 공익과 경제적 효과를 최대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방송은 공익적인 요소를 내세운다. 방송의 발전이 기간 산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방송 인프라 자체가 합유하고 공유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공공성의 가치는 더욱 극대화된다. 반면 통신은 경제적 효과다.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인 창조경제와 맞물려 더욱 막강한 존재감을 떨치는 경제적 가치는 통신의 필승카드이자, 모든 산업의 공간을 이루는 만병통치약이다.

하지만 700MHz 대역 주파수, 아니 주파수라는 자원의 특성을 이해하면 문제는 간단해지는 것이 아닐까? 물론 정부가 세수확보라는 대의명분으로 다분히 정치적인 수사를 내세운다면 모든 검토는 원점으로 돌아가겠지만, 주파수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정의하는 전파법의 존재는 이 모든 반론을 무력화시킬 확실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즉, 방송은 통신이 주장하

는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예로 들어보자. 공항과 같은 교통 인프라는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일종의 대국민 서비스로 정의될 수 있다. 물론 지배구조의 차이나 운용방식의 괴리감으로 인해 모든 인프라의 대국민 서비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지만, 적어도 방만한 공기업의 운용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생각하면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 아니 책무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와서, 이를 민영자본에 매각하는 것이 대의, 즉 공익에 해당되는 것일까?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인프라를 매각한다면 국가는 세수확보를 통한 재원확보에 나설 수 있다. 그런데 이 재원확보가 단순히 지표상의 플러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매출과 수익의 관점에서 일차원적인 그래프를 팔로우하면 말 그대로 지표에 남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공리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는 공공재의 활용에 대한 청사진은 전적으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위해 논의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주파수도 마찬가지다. 주파수 자원은 공리의,

즉 공공의 목적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활용방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더욱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원의 활용방안을 통해 평가해야 마땅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보편적 디바이스의 역할을 해내는 방송 활용설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하나의 이론에는 하나 이상의 단점이 있는 법이다. 보편적 디바이스를 강점으로 방송의 할당을 내세운다면 이 자체로 상당한 역풍을 맞을 확률도 있다.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통신 디바이스의 보편화 현상이 주파수 활용을 둘러싼 새로운 논리의 수혈점으로 그 분기를 맞을 확률도 있다. 여기에 유료방송을 방송의 범주로 끌어온다면 그 주체와 활용에 대한 정의와는 별개로 방송-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단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의 활용을 무작정 보편적 디바이스 활용의 척도로 재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주파수는 공공의 자원이라는 기본적인 시각으로 돌아와 특성에 맞는 판단 방식으로 이를 평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내세워야 한다. 어차피 결론은 하나로 귀결된다. 공리의 목적을 운명으로 삼아 버리는 자원의 특성상, 그 자원의 특성에 대한 할당 주장을 상대방의 논리로만 판단하는 부분은 아마추

어나 하는 행동이다. 공익적 요소에 숨어든 방송의 철학과 디바이스, C-P-N-D를 아우르는 미디어 생태계의 활성화 측면에서 창조경제를 이해하고 납득시킨다면 가능할 일이다.

공공재의 속성에 걸맞는 확실한 정부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협상의 기술로 활용될 여지도 있는데, 스스로의 강점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강점을 인정하고 이를 반박하는 순간 주파수의 할당을 둘러싼 여러가지 이견들은 순식간에 기업의 자본주의적 논리로 해석된다는 것도 주지해야 할 것이다.

700MHz 대역 주파수의 세계적 활용을 살펴보면, 통신 활용보다는 공공재 성격의 활용방안이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방송-통신의 할당전쟁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공공재의 성격에 알맞은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할당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는 콘텐츠와 플랫폼을 감안한 지상파 방송사의 오래된 속성을 혁신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빅브라더의 시대는 이미 현재진행형

고금석 뉴미디어발전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빅브라더 시대가 왔다. 모두가 의심했지만, 그리고 모두가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빅브라더의 시대는 우리의 생활로 깊숙이 찾아왔다.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집에서 회사까지 출근하는 동안 CCTV가 포착하는 모습이 평균 45개에서 891개로 늘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는 거대한 빅브라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원했다. 원하지 않았든.

사회학적 통찰과 풍자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의 소설 《1984년》에서 비롯된 빅브라더는 이제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하나의 사회 시스템의 총체적 구조로 인정받고 있다. 긍정적 의미로는 선의 목적으로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 부정적 의미로는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통제의 수단을 말하지만, 현재에 이르러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기능이 더욱 포착되고 있어 문제지만 사회적 환난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도 있는 이 빅브라더는 사실 엄청난 사회적 단점을 가지고 있다. 소설 《1984년》에서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소설 속의 사회를 끊임없이 감시한다. 이는 사회 곳곳에,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설치되어 있어 실로 가공할 만한 사생활 침해로 보여준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정보의 수집은 곧 무시무시한 권력의 기반이 된

다. 사회의 공간을 뒤흔드는 혁명의 기운을 잘라내며, 이는 우리 스스로에게 반항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암묵적인 횡포인 셈이다.

최근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미국 정보기관이 자신의 전화기를 도청했다는 사실을 격분한 적이 있다. 이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이 의외로 조용한 부분과는 차원이 다른 반발이다. 아니, 당연한 반응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정치적인 눈점에서 벗어나 빅브라더의 관점으로 메르켈 총리의 사태를 바라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제 한 나라의 수반도 빅브라더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도 이제 엄연한 빅브라더의 시대다. 요소요소에 박혀 돌아가는 CCTV와 자동차 블랙박스,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각종 기억과 흔적들은 모두 빅브라더의 권력으로 종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하지만 부정적인 성향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 속에서 빅브라더의 권력이 되어 가는 현실을 비판하자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도 빅브라더의 시선은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온다.

사실 빅브라더는 빅데이터와 연관이 많다. 그리고 현재 빅

데이터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사항들을 그 세부적인 기류를 통해 잡아내는 기술로 성장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빅브라더의 절묘한 만남인 셈이다.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에서는 탈세와 사기 등 금융범죄도 늘어 났고 이는 다시 국가의 재정에 위기를 안겼다. 미국의 탈세 금액은 2010년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총액을 초과했을 정도다.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감시기능으로 도저히 잡아낼 수 없는 단계. 결국 미국 국제청은 탈세를 줄여보기 위해 사기 범죄 방지 솔루션, 소셜네트워크 분석, 데이터 통합과 마이닝 등을 활용해 세금 누락을 막고 불필요한 세금 환급을 줄이는 효과도 얻었다.

바로 여기서 빅데이터와 빅브라더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물론 긍정적인 사례다. 그러나 과연 이것만 있을까? 빅브라더와 빅데이터의 만남은 긍정적인 요소의 발견과 더불어 사생활 침해라는 기본적인 헌법의 틀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부정적인 요소는 컨트롤에서 논의되는 분위기다.

여기서 가장 명확한 것은 따로 있다. 정부의 세수확보라는 긍정적인 전제를 하나의 이유로 내세운다고 해도, 빅데이터

와 빅브라더의 등장을 마냥 반길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세계는 안전하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법이다. 우리는 빅브라더와 빅데이터의 혼합이라는 절대적 시대의 명제 속에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놓아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논의가 큰틀에서만 논의되는 불합리함을 먼저 지적하고, 스스로의 국민주권을 잡아가야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 있고 우리가 빅브라더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빅브라더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빅브라더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빅브라더와 빅데이터의 만남을 통해 발생한 기계적 시너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아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사실 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기본적인 저항의 틀을 놓지 않으며 빅브라더의 시대를 밀어내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의 조류에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숙제라면 숙제다. 우리는 이미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필요한 순기능을 발견한 순간 새로운 단계를 밟아야 하는 목전에 이르고 말았다.

언론을 보는 맑은 창!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언론의 속살을 보면 진실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국내 최고의 미디어비평 전문 주간신문 **미디어오늘**에서 깊이 있고 빠른 미디어세계를 만나십시오.

구독신청 : 전화 02-2644-9944(미디어오늘 판매팀)
인 터 넷 : www.mediatoday.co.kr 정기구독신청 이메일 : help@mediatoday.co.kr
구독료 : 1년 5만원, 3년 13만원, 5년 20만원, 평생독자 100만원 (우편 및 택배 발송)
구독료 납부 : 지로 매월 20일경 지로용지 발송,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407501-01-002289 (예금주 : 미디어오늘)

KOBASHOW 2014



24회 국제방송 · 음향 · 조명기기전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2014.05.20-23

COEX, SEOUL

www.kobashow.com

주 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이앤엑스

후 원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방송통신위원회 · 서울특별시 · KBS · MBC · SBS · EBS · OBS · 한국영상산업협회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별후원 CBS · 아리랑국제방송 · tbs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

